

2022년 7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 시	참 석 인 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 고
김창숙	07.03	[뉴스현장] 여야 '서해 피살' 신경전... 원구성 제자리 협상 [라이브투데이 1부] 분열 기름 부은 미 낙태권 판결... 시위·충돌 확산	
김홍태	07.10	[뉴스포커스]상반기 103억 달러 적자...역대 최대 규모 [뉴스포커스]1억 초과 DSR 40%...생애최초 LTV 80%로	
임윤주	07.17	[뉴스센터13]"모든 곳에 포탄이"...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주민에 피난 촉구 [뉴스현장] 한국갤럽 "윤대통령 잘한다 37% 잘못한다 49%"	
안호림	07.24	[뉴스리뷰] 경찰청 "중립성 지켜" 평가...반발 수습 과제 [뉴스15] 3년 만에 열린 '퀴어축제'...찬반 갈등 고조	
임윤주	07.31	[뉴스리뷰] '대형마트 의무휴업' 10년...폐지 놓고 갈등 재연 [뉴스센터13]박지현, 지도부 불허에도 출마선언..."반려 가능성"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 분	성 명	전 · 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 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활동	김창숙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2018. 12. 27	-
활동	안호림	인천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2021. 01. 26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2 7/3(일)	김창숙	6월 27일 오후 7시 <뉴스프라임>에서는 7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한국전력의 발표 내용을 취재기자를 연결해 전했습니다. 기사는 한전이 올해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폭을 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듯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은 가뜰이나 힘든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 인상은 수용하더라도 앞의 보도에서 언급했듯이 요금 인상이 한전의 만성적자 구조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면 다른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이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만성적자 구조를 만들어내는 정책적인 요인이나 사업운영 및 사업 구조 등의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국민 부담으로 매번 적자를 메우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와 맞물려 2분기 요금 조정 때부터 계속 논의되고 여러 차례 보도돼왔던 사안입니다. '뉴스프라임' 현장 연결이 이뤄진 6월 27일은 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단행된 날로, 심층 리포트가 아니라 당일 인상 결정 내역을 제한된 시간내에 전달하는 것이었던데다, 가스요금 인상 발표도 동시에 이뤄져 상세하게 다루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앞서 '누더기적자' 한전, 요금 인상안 제출...20일 결론'(6.15), '내주 전기요금 인상 발표...그래도 대규모 적자 불가피'(6.24) 등 수차례 리포트를 통해 한전이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SMP, 일종의 도매가격)이 연료비 급등으로 치솟는 반면, 고객에게 받는 요금은 인상폭이 적고 분기단위로 고정되어 있어 요금 인상이 한계까지 이뤄져도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함을 다룬 바 있습니다.
2022 7/10(일)	김홍태	지난 1일 오전 11시 뉴스포커스에서는 지난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1억원 초과 대출자는 은행에서 월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새 정부가 DSR 규제만큼은 유지 또는 강화해 가계	DSR과 LTV 등의 용어의 이해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융용어가 금융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새롭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와 연초에 결정된 3단계 대출규제 사안을 예정시점이 당도해 시행한 것으로, 상황이 결정됐을 때 세세히 리포트를 통해

		부채 관리 의지를 보이고 있으면서, 실수요층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완화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8주째 전국의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데요. 지난 1일 뉴스포커스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과 관련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시청자들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최소한 간단하게라도 용어를 풀어서 설명하고 내용에 대한 부가설명을 했더라면 시청자들의 뉴스 이해가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관련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언제부터 가능한지를 분명히 했더라면 내용을 이해하기 좋았을 것입니다. 시청자들의 현실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사용되는 용어와 이에 따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해를 도울 방법을 찾아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룬 바 있습니다. 또 해당 신문은 뉴스센터 13에서도 전반부에 배포됐는데, 같은 프로그램에 경제평론가가 출연해 상세하게 별도의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부동산가 상승에 금융 규제가 수년에 걸쳐 강력히 시행되면서 DSR해진 표현이자 실제 경험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만 636만 가구에 이르고 실질적으로 집을 사기 위한 신용대출,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까지 더하면 1천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40초 이내의 시간 안에 기사를 다뤄야 하는 단신 성격상 세부적 설명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 7/17(일)	임윤주	지난 7일 오후 4시 방영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에서도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변화를 살펴보면, 관련 이슈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뉴스1번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직후 직무 수행평가를 비교하는 등 흥미로운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뉴스1번지>에서는 인사이드케이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지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5주간의 지지율 변화 그래프가 함께 제공되어, 국정 운영 지지율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치 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었습니다. 데드크로스, 과반 이상의 부정 평가 비율, 대선 당시 득	여론조사 결과 설명에서 '핵심 지지층의 지지율 변화'와 같이 관심도가 높은 부분은 연령대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지적 유념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기관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 설명할 때는 조사기간, 응답자수 등 조사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소개해 서로 다른 조건에서 조사됐음을 알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율 보다 낮은 긍정 평가 비율 등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잘 전달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대선 당시 지지했던 지지층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덧붙이며, 대구 경북 지역, 60대, 주부 등을 핵심 지지층으로 꼽았는데요. 실제로 지난 5주간의 지지율 그래프에서 설명한 핵심 지지층의 지지율 변화도 그래프나 표로 함께 제시되었다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체 지지율만 보여준 자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계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인지, 혹은 특정 계층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하게 언급한 지지 계층 외 다른 계층에서 더 많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령별로는 50대에서,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계층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전주 대비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지지층 이탈 등 계층별 지지율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관련 자료가 함께 첨부된다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의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본 것은 매우 흥미로웠으며 현재의 지지율 수치를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점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가 지적인 대로 시대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불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비교 등을 통해 전달되는 바가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으로는, 제시된 수치가 앞서 살펴본 국정 운영 지지율 결과와 수치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요. 앞서 살펴본 지지율 그래프에서 부정 평가가 44%인 반면, 역대 대통령 지지율 비교 그래프에서의 부정 평가는 36%입니다. 조사 기간, 응답자 수, 조사를 수행한 조사 기관 등이 차이가 납니다. 시청자가 앞서 접한	
--	--	--	--

		수치와 혼동을 겪지 않도록, 여러 기관의 조사 결과를 함께 보도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따로 언급해주는 등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2 7/24(일)	안호림	7월 10일 오후 6시<일요와이드>에서의 스리랑카 대통령 사임 소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사는 스리랑카의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현지시간 9일 밤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사태를 연일 시위 진행 상황과 라자팍사 대통령의 행보 등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짧은 사실 보도지만, 7월 10일 <뉴스와이드>기사에는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2019년에 대선에 승리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라자팍사 대통령은 2019년 대선 승리로 3선을 달성했는데, 기사의 표현은 마치 처음으로 당선된 것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12일 <뉴스센터12>에서는 현지 특파원의 목소리로 사태의 전개 과정, 원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했는데요. 기사에서는 최근 악화된 경제상황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며,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유로는 국가 부채 증가, 관광산업 몰락으로 인한 외화수입 감소, 최근 급등한 국제유가와 식량 가격으로 인한 물가 급등 등이라고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기사만 보면 이번 스리랑카 사태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경제난이 주된 이유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물론 스리랑카 사태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된 경제상황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오랫동안 스리랑카 정치를 지배해온 라자팍사 가문의 족벌정치, 부정부패와 잘못된 정부의 경제 정책 등 내부적인 요인과 결합되어 나온 결과이기도 한데요. 사태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좀 더 상세한 해설기사가 아쉬웠습니다.	르포성 기사의 경우 출장 간 특파원이 시위 분위기와 현장 목소리를 직접 담아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대적으로 누락된 원인을 다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 스리랑카 경제 위기와 정국 불안 상황을 다룰 때 지적인 내용 외인 영상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염두에 두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7/31(일)	임윤주	지난 6월 23일 오후 6시 <뉴스워치>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운영해 온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청원’이 폐지되고 ‘국민제안’이 신설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하는 질문에 답변을 했던 ‘국민청원’과 달리, ‘국민제안’은 정부	지적하신 ‘대형마트 의무휴업’ 사안은 말씀하신대로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사안이라 경제부 뿐 아니라 정치부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는 사안입니다. 정치단신 기사로 처리가 돼 구체 내용은 언급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해당 사안이

	가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답변을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었습니다. 7월 20일 오후 6시 <뉴스워치>에서는,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에 올라온 여러 안건 가운데 10건의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1만 2천 건의 국민제안 가운데, 심사위원들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생활 밀착형 제안 10건을 선정한 것입니다. 선정된 우수 제안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K-교통패스 등이 포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살펴본 국민제안 10건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건 가운데 실제로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최종 3건인데요. 21일 뉴스에서 기자가 언급한 바 있듯이, 최종 3건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법 개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많은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제안은 가장 많은 투표수를 획득하고 있는 안건 중 하나로, 향후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슈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업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온라인 마켓 업체들은 영업 제한이 없는 반면, 대형마트만 제한을 받는 것이 시장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줄이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위의 이러한 행보가 향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해당 이슈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투표가 완료될 때까지는 보다 더 신중하되 명확하고 다양한 정보가 전달되어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결될 때까지 신중하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자세히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22. 7. 03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53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립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에 대해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끼워팔기라며 거부한 가운데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단독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나선 것인데요. 몇 주째 공전하고 있는 원구성 협상 문제가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다른 이슈들과 맞물려 오히려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도 이런 정치권 상황을 비중있게 다뤘는데, 6월 27일 오후 2시 뉴스현장에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움직임을 전했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기자는 국민의힘이 전 정권을 겨냥해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6월 27일 오전,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 의원은 이에 반대한다면 진실을 규명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진정성이 없는 거리면서,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면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필요한 대통령 지정기록물 공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하 의원은 앞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핵심 배후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고 주장하며, 관공비자로 급히 미국행에 나선 점을 꼬집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현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 주장은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자체 TF를 띄워 사실 왜곡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6월 27일 오전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을 면담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구서’를 전달하고 관련 기록물 공개를 국회에서 의결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 13일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한 가운데, 민주당은 유족 측의 요구를 당내 TF로 일원화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기자는 여야의 팽팽한 대립 속에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은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당내 의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법사위원장을 조건부로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방안을 내놔는데, 그 조건인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6월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라면서, 국회의 장단과 법사위원장부터 선출하자고 역제안했고,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대해선 “검수완박 악법 끼워 팔기”라고 날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어렵게 내린 결단을 국민의힘이 뿌리쳤다”며 “일방적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전까지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밝혔지만 답이 없자, 박 원내대표가 원 구성 관련 별도의 입장 발표에 나선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6월 28일부터 필리핀 출장에 나설 예정이라, 여야 대립이 지속되며 7월 초까지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단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야가 이슈마다 서로를 비난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권 상황을 보도할 때 자칫 갈등을 조장하는 저널리즘의 행태를 보일 수 있는데요. 갈등만을 부각하는 보도행태는 정치적 공방을 집단간의 갈등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즉,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 집단간의 싸움으로 치부되어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지를 시청자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서로를 향한 정치권의 비난의 목소리만 그대로 전달하는 보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각 이슈에 대한 정당들의 입장의 배경은 무엇인지,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지, 제3의 대안은 없는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보도방식을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6월 27일 오후 7시 <뉴스프라임>에서는 7월부터 전기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한국전력의 발표 내용을 취재기자를 연결해 전했습니다. 기자는 한전이 올해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폭을 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분기마다 조정이 가능한 연료비 조정요금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결정에 따라 7월부터 평균적인 4인가구 월 전기요금이 약 1,535원 오를 전망이지만, 한전의 적자규모가 올해 1분기에만 사상 최대인 7조7,869억원에 이르고,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로 전망되는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전했습니다. 한전은 고공행진 중인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원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당초 킬로와트시당 ±3원으로 연료비 조정단가가 정해졌지만 이를 연간 조정폭인 ±5원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7월부터 분기당 5원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간 조정폭은 5원인 현행 조정폭이 유지되면서 4분기에 연료비 조정단가 추가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기자는 7월부터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당 1.11원 오른다는 내용도 짚으며,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이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늘어, 월 2,220원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은 가뜰이나 힘든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 인상은 수용하더라도 앞의 보도에서 언급했듯이 요금 인상이 한전의 만성적자 구조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면 다른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이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만성적자 구조를 만들어내는 정책적인 요인이나 사업운영 및 사업 구조 등의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국민 부담으로 매년 적자를 메우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27일 오전 7시 <라이트투데이>에서는 미국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으로 미국에서 시위, 충돌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은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10개 주에서는 낙태가 금지됐는데,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낙태를 불법화되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 적용된 지역으로 오클라호마, 애리조나, 루이지애나 등을 꼽았습니다. 특파원은 이들 지역 병원이 임신 중절 수술을 속속 중단하기 시작했다고 전하며, 아칸소주 리틀록의 한 병원은 대법원 결정이 온라인에 공개되자마자 문을 닫았고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의 한 여성 전문 병원도 문을 닫고 직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외신을 인용했습니다. 낙태권 옹호 단체들은 미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낙태권 보장을 지지하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낙태를 시술하거나 도와준 사람, 낙태 시술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다른 주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내놓으며 맞대응에 나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골드만삭스, 나이키 등 미국 유명기업들도 직원들의 원정 낙태 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대법원 판결에 반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는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시위대를 향해 트럭이 돌진해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충돌 양상도 빚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보수, 진보 진영의 첨예한 논쟁거리였던 낙태권 폐기 판결을 계기로 미국 사회의 분열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특히 보수화된 대법원이 동성혼, 피임 등 다른 판결도 뒤집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 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낙태권 보장의 근거가 됐던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놓고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워낙 포편적인 이슈다 보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만만치 않은 찬반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가 6월 27일 보도한 <뉴스현장>은 미국의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해외 이슈를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검토해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유익했는데요. 다만, 극명한 입장차가 있는 이슈를 다룰 때는 양 쪽의 의견이 균형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2. 7. 10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554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루비니 교수의 복합 경제 위기와 세계증시의 추가하락을 예고한 소식과 우리나라의 상반기 무역적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 외환위기 때의 적자 폭보다도 더 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이 본격화하면서 여행·교통, 문화·레저 등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늘고, 배달음식 온라인 주문액이 처음으로 줄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 그 동안의 규제가 조금씩 풀린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지난 1일에는 사흘 동안 집중호우가 쏟아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피해가 속출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1시 뉴스센터13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복합 경제위기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증시의 추가 급락을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국제 기고 전문 매체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경착륙이 예상된다고 해서 중앙은행들이 통화긴축을 중단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면서 경기가 과열되거나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시다발적인 글로벌 경기침체가 나타날 수 있으며 미국 등 세계 주식시장의 추락이 “50%에 가까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1일 오전 11시 뉴스포커스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반기 103억 달러의 역대 최대 무역적자를 냈다고 전했는데요, 수출은 늘었지만 에너지, 원자재 값 폭등에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한 탓이라며, 우리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3,503억 달러, 수입은 26.2% 늘어난 3,606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한화로 약 13조원 적자였다고 합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전했는데요, 이전 최고치는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 상반기에 기록한 91억6,000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증가에도 적자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이란다요,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400억달러 이상 증가한 879억달러로 집계돼 무역적자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습니다. 6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늘어난 577억 3,000만달러로, 지난해 6월 547억 8,000만 달러를 넘어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수입액이 602억 달러로 24억7,000만 달러 적자를 내 무역수지는 석 달째 적자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이후 14년 만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8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5주차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한 주 전보다 21.9원 오른 ㄹ당 2,137.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 가격도 한 주 전보다 31.1원 오른 ㄹ당 2,158.2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돼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던 기름세는 꺾인 상황이며, 지난 2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2,125.75원으로 하루 전보다 3원 내렸고 경유 가격도 2,155.8원으로 2원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하는데요, 최악의 경제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용어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의 저성장에 고물가의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의 인상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은행(WB)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위의 보도에서 현재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 무역수지 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 상반기의 적자 기록을 넘어서었으며, 무역수지 적 달째 연속 적자를 낸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14년 만이라고 합니다. 무역수지 적자 보도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경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세계 주식시장 추락이 50%에 가까울 수 있다고 했다는데요, 함께 현재의 상황에서의 주가 반등은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니라 하락장의 흐름에서 일시적 반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시청자들이 참고할 만한 부분이고 관심을 가질 부분이기때 빠지 않고 보도했더라면 좀 더 유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제상황에 대하여 코로나로 힘들었던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인상, 그리고 중국의 경제봉쇄 조치와 같은 대형변수들이 함께 발생하면서 더욱 힘든 상황이라는 점도 얘기할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추후보도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가 필요한지도 간단히 집고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2일 밤 12시 뉴스24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이 본격화하면서 여행·교통, 문화·레저 등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크게 늘어난 반면, 배달음식 온라인 주문액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7조2,859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5% 늘었으며, 특히 항공권과 버스·기차표, 렌터카, 숙박시설 예매 등 여행과 교통서비스 거래액은 1조5,642억원으로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5월 배달음식 온라인쇼핑액은 2조613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의 방역 조치 완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여행 및 교통서비스와 문화 및 레저서비스 분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크게 증가했고, 음식 배달서비스 거래액 증가 폭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일상으로의 회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리는 좋은 신호입니다. 다만 통계청의 보도는 항목이 더 세부적이고 내용이 더 자세하게 발표되었을 것인데요,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는 각종 내용에 대하여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기때 통계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난 1일 낮 12시 뉴스센터13에서는 사흘 동안 집중호우가 쏟아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피해가 속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소방에 따르면 비가 계속되면서 종로구 혜화동 경신고등학교에선 학교 내 통학로의 지반이 무너져 싱크홀이 발생했고, 인근에 있던 석축도 붕괴됐다고 전했는데요,서초구 우면동에선 공사 중이던 3m 높이의 담장이 무너지며 주차된 차량 1대가 파손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인천 송도에선 차량이 침수돼 탑승자가 고립됐다 구조됐고, 강풍으로 건물의 지붕이 무너지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10시 뉴스포커스에서는 서울에서 집중호우가 이틀째 이어지며 서울 종로구의 한 고등학교 통학로에서 지반침하, 싱크홀이 발생했고 또 운동장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물이 넘치면서 학교 인근 주택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석축 일부가 붕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따라 오전 취임식 일정을 취소하고 해당 학교를 방문해 피해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달 30일 낮12시 뉴스센터 12에서는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어 2년 만에 잠수

교의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고 하면서, 잠수교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의 날씨 보도가 있었습니다. 캐스터는 당일 오전부터 폭우로 인해 잠수교 차량 통행과 보행자 통행이 모두 제한됐고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 대교교와 경기 진관교에는 홍수주의보도 내려졌다고 하면서, 하천 범람 위험이 높은 만큼 인근 주민들은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강한 비구름이 서울 등 중부지방에 집중되며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수도권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 강원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라고 전하며, 주말 동안 장맛비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겠지만 다음 주 다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일 폭우로 인해 서울의 경신고등학교에서 싱크홀이 나타나고 축대가 무너졌는데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전 취임식 일정을 취소하고 해당 학교를 방문해 피해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큰 비로 인해 고등학교에서 피해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잘못하면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우려와 대책 강구의 목소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보도내용처럼 앞으로 더 많은 비가 예상되고, 매우 강한 태풍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대비가 이뤄지고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점검 보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태풍 등 대비를 위해 간단한 대피 요령이 소개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폭우가 발생할 때 시청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교통 통제 상황입니다. 폭우의 피해 보도와 함께 교통 통제 상황에 대한 보도가 없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제에 의해 교통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보도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11시 뉴스포커스에서는 지난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1억원 초과 대출자는 은행에서 월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새 정부가 DSR 규제만큼은 유지 또는 강화해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보이고 있으면서, 실수요층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완화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8주째 전국의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데요. 지난 1일 뉴스포커스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과 관련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시청자들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최소한 간단하게라도 용어를 풀어서 설명하고 내용에 대한 부가설명을 했더라면 시청자들의 뉴스 이해가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관련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언제부터 가능한지를 분명히 했더라면 내용을 이해하기 좋았을 것입니다. 시청자들의 현실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사용되는 용어와 이에 따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해를 도울 방법을 찾아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2. 7. 17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55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공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4시 방영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에서도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를 변화를 살펴보며, 관련 이슈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뉴스1번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직후 직무 수행평가를 비교하는 등 흥미로운 분

석들이 있었습니다. <뉴스1번지>에서는 인사이트케이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지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을 살펴보았습니다. 활용된 자료는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의 주간 집계 결과였으며, 6월 1주 차부터 5주 차까지의 지지율을 시계열로 보여주었습니다. 배종찬 연구소장은 지난 5주간의 지지율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먼저 짚어볼 사안으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엇갈리며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한, 부정 평가가 50%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긍정 평가의 비율이 대통령 선거 당시 획득했던 득표율 약 48%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 60대 이상, 주부 계층, 이른바 ‘대륙주’라고 불리는 핵심 지지층에서 지지율을 잃을 경우 향후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졌는데요, 해당 조사에서는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물어본 결과, ‘여권 내부 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경제 대책 미흡’, ‘정책 불안’ 등의 요인들이 이어졌습니다. 배종찬 연구소장은 주요 원인들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 이후, 이러한 개별 요인들보다도 전반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과 태도 등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변화가 필요함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13대 노태우 대통령부터 현재 20대 윤석열 대통령까지 취임 직후 직무 수행평가에 대한 긍/부정 그래프가 자료로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 평가는 노태우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등, 이른바 취임 초기 누릴 수 있는 ‘허니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주간의 지지율 변화 그래프가 함께 제공되어, 국정 운영 지지율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치 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었습니다. 데드크로스, 과반 이상의 부정 평가 비율, 대선 당시 득표율 보다 낮은 긍정 평가 비율 등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잘 전달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대선 당시 지지했던 지지층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덧붙이며, 대구 경북 지역, 60대, 주부 등을 핵심 지지층으로 꼽았는데요. 실제로 지난 5주간의 지지율 그래프에서 설명한 핵심 지지층의 지지율 변화도 그래프나 표로 함께 제시되었다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체 지지율만 보여준 자료를 통해서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계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인지, 혹은 특정 계층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하게 언급한 지지 계층 외 다른 계층에서 더 많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령별로는 50대에서,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계층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전주 대비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지지층 이탈 등 계층별 지지율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관련 자료가 함께 첨부된다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의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본 것은 매우 흥미로웠으며 현재의 지지율 수치를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점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가 지적인 대로 시대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불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비교 등을 통해 전달되는 바가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으로는, 제시된 수치가 앞서 살펴본 국정 운영 지지율 결과와 수치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요. 앞서 살펴본 지지율 그래프에서 부정 평가가 44%인 반면, 역대 대통령 지지율 비교 그래프에서의 부정 평가는 36%입니다. 조사기간, 응답자 수, 조사를 수행한 조사 기관 등이 차이가 납니다. 시청자가 앞서 접한 수치와 혼동을 겪지 않도록, 여러 기관의 조사 결과

를 함께 보도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따로 언급해주는 등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날 8일 오후 2시 뉴스현장에서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8일 오후 2시 뉴스현장에서는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30%대로 떨어진 부분을 주목하여 보도했습니다. 해당 뉴스에 활용된 조사는 한국갤럽의 7월 1주 차 조사 결과로,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긍정 평가 비율은 37%,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 평가 비율은 49%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관의 1주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6% 포인트 하락, 부정 평가는 7% 포인트 상승하며, 7월 1주 차에 처음으로 부정 평가 비율이 긍정 평가를 앞섰습니다. 6월 3주 차부터 7월 1주 차까지의 지지율 그래프 변화를 보여주며,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는 멘트로 마무리되었는데요. 바로 전날인 7일 뉴스에 보도된 지지율 그래프에서는 이미 6월 4주 차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으며, 이로 인해 ‘데드크로스’라는 말도 재차 언급되었습니다. 여론조사의 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인 바와 같이, 상이한 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임을 언급하거나, 혹은 이 기관에서 수행한 조사 결과에서는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는 등, 동일 기관 조사 내에서의 해석임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시작한 지 130여일이 지났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합뉴스TV에서 보도된 뉴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6일 오후 4시에 방영된 <뉴스1번지> 내 ‘뉴스 속 뉴스’에서는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월 발발 이후 넉 달 정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워싱턴포스트나 CNN과 같은 언론들이 휴전 혹은 종전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위원은 러시아의 압승을 예상했던 초기 대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당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전쟁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제 위기는 물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자국민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원유 수출로 여전히 이익을 보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쉽사리 휴전이나 종전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반대의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7일 오후 1시 뉴스센터13에서는 강화되는 러시아의 공세에 우크라이나 당국이 자국민들에게 피난을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돈바스를 이루는 2개 주 가운데 1개 주 전체를 사실상 완전 점령한 러시아 군이 나머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지역 주민 대부분이 피난을 떠났으나 여전히 30만 명 이상이 남아있어 당국이 피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발생한 지 100일을 기점으로 이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전해집니다. 전세계 SNS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앵커도 지적인 바 있듯이 전 세계 뉴스에서 보도되는 뉴스의 양도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러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전세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잊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합뉴스TV에서는 거의 매주 관련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피해 상황은 물론, 해당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따라오는 경제적 여파 등 다양한 방면에서 뉴스를 전해 주고 있어, 본 이슈와 관련해서 뉴스 전문 채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차원을 넘어 전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 인류적 공극적인 차원에서라도 해당 이슈는 우리 국민들이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관련하여 지속적인 보도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안호림 시청자평가원(22. 7. 24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56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많은 논란과 경찰 내 반발을 초래했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연합뉴스TV는 15일 <뉴스센터 13>을 통해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개선헌안 최종안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컸던 행안부 내 경찰을 관리하는 새로운 조직은 예상대로 '경찰국'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기사는 경찰국의 조직 구조와 인력, 주요 업무 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경찰국 설치와 함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예산 관련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의 내용이 담긴 '경찰청장 지휘규칙'도 제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인사, 수사 등 민감한 부분은 지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이 장관은 개선헌안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리뷰>에서는 이번 경찰제도개선헌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경찰청의 공식 입장문을 인용하면서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헌안 최종안에 대해 경찰은 일단 중립성과 독립성이 침해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실 경찰국 구성원 대부분이 경찰관이고, 업무 범위도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 지원에만 한정되어 독자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건데요, 기사는 경찰청이 내부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거셌던 만큼 내용을 수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을 예측했습니다. 내부 반대를 주도해 온 경찰직장협의회는 추후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기사는 경찰 지휘부가 직협 대표단 20(사무)여명과 21일 만나기로 하는 등 내부 달래기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찰제도개선헌안에 대해서는 특히 경찰 내부에서 많은 사발 투쟁 등 거센 반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제도개선헌안 최종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었는데요, 연합뉴스TV에서의 <뉴스센터 13>에서는 행안부의 최종안 주요 내용을, <뉴스리뷰>에서는 경찰청, 그리고 경찰직장협의회 반응에 대해 전했습니다. <뉴스리뷰> 기사에서는 경찰청의 입장은 전했지만 경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청과 달리 이번 개선헌안"현행법 체계와 상충된다", "치안은 행안부장관 사무가 아니다"라며 같은 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뉴스리뷰>기사가 경찰청만의 입장만을 보도하다 보니 신실안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충분히 보도하지는 못한 기사가 되었습니다. (같은 날 <뉴스현장>의 보도에서는 경찰청의 공식 입장문에서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아쉽다"라고 밝혔다고도 전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바람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지난 7월 16일 2년동안 코로나사태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쿼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쿼어문화축제가 개최될 때마다 특히 종교적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이들의 맞불집회가 열리기도 해서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지난 17일에 방송된 오전 8시 일요와이드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기사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만에 23번째 서울쿼어문화축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울쿼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의 발언을 빌어 이번 축제의 목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기사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참가한 사실을 전하면서 그가 연설하는 모습을 비추기도 했는데요, 기사는 쿼어문화축제에 맞추어 인근에서 열린 맞불집회의 모습을 조명하며 집회에 참가한 한 단체대표의 연설을 짧게 보여주었습니다. 기사는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쿼어문화축제를 비롯한 여러 집회와 행사가 열려서 한때 극심한 교통혼잡이 벌어졌지만, 별 충돌없이 마무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16일 <뉴스15>에서는 김성수 문화평론가를 초청하여 쿼어문화축제를

를 둘러싼 각종 이슈에 대한 상세한 대담이 이루어졌습니다. 17일 오후 3시 뉴스에서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16일 개최된 쿼어문화축제에 대한 여러 논란에 대해 짚어보았는데요, 첫 번째 이번 행사의 의의에 대해서는 3년만에 오프라인에서 개최되는 쿼어축제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사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자는 인권 신장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축제에 반대에 맞불집회를 벌이고 있는 반대측의 주된 주장에 대해서는, 그 중심에는 종교적인 신념과 태도가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들이 서울시의 열린 공간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데에 대한 가장 중심적인 논리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서울광장에서 쿼어축제에 대한 반대의견이 다수를 이룬 것에 대해서는, 성소수자는 사회적으로 소수의 입장에 처한 이들인데 이는 당연할 수 밖에 없고, 만약 질문이 이들이 남과 다르다고 차별하고 무시해도 되는가였다면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8분 35초~)이번 행사에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대사가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이들 참석의 의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표명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결혼과 쿼어축제에 대해서 해외 국가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짚어보기도 했습니다. 반대논리는 당연히 허용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광장에서 행사를 벌이는 이유는 이를 통해 찬반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대담에서는 이외에도 쿼어문화축제가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성소수자 이슈가 가장 큰 반대이유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쿼어문화축제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은 한국사회가 성숙해가고, 다양화되면서 겪는 많은 진통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서울광장에서 개최되고 있는 서울쿼어문화축제는 처음부터 이를 반대하는 이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란과 갈등을 통해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일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양쪽의 주장이 널리 알려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올해 쿼어문화축제에 대해 몇 차례 다룬 바 있습니다. <일요와이드> 보도에서는 비록 짧은 기사였지만 양측의 주장을 골고루 담고자 한 점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 다만, 너무 짧다 보니, 이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는 정확히 알기 힘들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뉴스15>의 인터뷰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사의 겉모습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만 주목하지 않고 양쪽의 핵심적인 주장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행사가 갖는 의의, 목적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있어서 쿼어문화축제 자체에 대해서도, 이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도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스리랑카에서 지난 9일 경제난으로 인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사임을 발표하고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도 연일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7월 10일 오후 6시<일요와이드>에서의 스리랑카 대통령 사임 소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사는 스리랑카의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현지시간 9일 밤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오는 13일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국회의장을 통해 전했다고 합니다. 2019년 대선에서 승리한 라자팍사 대통령은 스리랑카 경제난의 책임을 물어 야권과 국민 다수로부터 사임을 요구받아 왔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사임 발표는 각 정당 대표들이 대통령과 총리 사임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시위대가 대통령 집무동에 물러오자 라자팍사 대통령은 긴급 대피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시위대는 대통령 집무동과 관저에 난입했고,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의 자택에도 불을 질렀습니다. 각 정당 대표들은 아베이와르데나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했는데요, 곧 의회를 소집해 대통령 직무 대행을 공식 선출하고 임시 거국 정부 구성과 선거 일정 발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사는 야권이 분열되어 있고, 정국을 이끌 대안 세력이 별로 없다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12일 낮 12시<뉴스센터12>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전망에 대한 해설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는 콜롬보 현지의 특파원의 보도로 스리랑카 사태의 진행상황을 전했습니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이 사임을 발표했지만 시위대는 대통령이 실제로 물러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집무실과 관저 점령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위로 개방된 대통령 관저에는 시위대와 관광객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는 라

자파사 대통령이 물러난게 된 원인은 경제난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스리랑카는 중국 중도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채에 수렁에 빠졌고, 2019년 '부활절 연쇄 폭탄 테러'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 수입원이던 관광산업이 몰락했다고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와 식량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급격하게 올랐고, 석유와 생필품 수입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석유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길가에 차량 보기가 어려웠고, 관공서, 병원, 학교 운영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당분간 국회의장이 대통령 대행 맡게 됐다고 하는데요. 국회는 조만간 새 대통령, 총리, 내각을 세울 전망이지만 구체적인 경제 회복 방안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사는 대통령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정국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사태를 연일 시위 진행 상황과 라자파사 대통령의 행보 등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짧은 사실보도지만, 7월 10일 <뉴스와이드>기사에는 고타바야 라자파사 대통령이 2019년에 대선에 승리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라자파사 대통령은 2019년 대선 승리로 3선을 달성했는데, 기사의 표현은 마치 처음으로 당선된 것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12일 <뉴스센터12>에서는 현지 특파원의 목소리로 사태의 전개과정, 원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했는데요. 기사에서는 최근 악화된 경제상황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며,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유로는 국가 부채 증가, 관광산업 몰락으로 인한 외화수입 감소, 최근 급등한 국제유가와 식량 가격으로 인한 물가 급등 등이라고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기사만 보면 이번 스리랑카 사태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경제난이 주된 이유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물론 스리랑카 사태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된 경제상황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오랫동안 스리랑카 정치를 지배해온 라자파사 가문의 족벌정치, 부정부패와 잘못된 정부의 경제 정책 등 내부적인 요인과 결합되어 나온 결과이기도 한데요. 사태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좀 더 상세한 해설기사가 아쉬웠습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2. 7. 31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557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지난 2012년에 시작된 것으로,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최근 이를 둘러싸고 다시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합뉴스TV는 지난 21일 저녁 9시 <뉴스리뷰>에서 다뤘는데 보도된 뉴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2012년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10여 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은, 본래 보호하고자 했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지적과, 그로 인한 불편함은 소비자들의 몫이 가장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보호라는 취지와는 달리, 마트에 입점한 자영업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역차별 논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대통령실이 선정한 실행 가능한 국민제안 10개에 선정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된 것인데요. 10개의 제안은 향후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3개의 제안으로 추려진다고 전했습니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이를 반기는 반면, 소상공인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업체가 준비하고 있던 온라인 전환의 기회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반응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살펴본 보도 내용은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본 이슈는 지난 10여 년 간, 갈등과 논란이 꾸준히 반복되어온 문제로,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뉴스 초반 언급된 갈등의 예시들은 대부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뒷받침하는 사례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뉴스 후반 양측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보도하여, 양측의 입장이 어떠한지 잘 전달해주었습니다. 다만 본 이슈처럼 오랜 기간 갈등이 지속하여온 문제일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언급한 사례들을 수치 등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언급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성장세를 간단하게라도 실제 수치를 언급해주거나, 소비자 인식과 관련해서는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해당 이슈와 관련한 소비자 인식 조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1년 이내 대형마트 이용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응답자의 약 68%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을 했는데요. 이처럼 민감한 이슈일수록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보도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이 언급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연합뉴스TV의 6월 23일 보도와 7월 20일 보도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 오후 6시 <뉴스워치>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운영해 온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청원'이 폐지되고 '국민제안'이 신설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하는 질문에 답변을 했던 '국민청원'과 달리, '국민제안'은 정부가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답변을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었습니다. 7월 20일 오후 6시 <뉴스워치>에서는,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에 올라온 여러 안건 가운데 10건의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1만 2천 건의 국민제안 가운데, 심사위원들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생활 밀착형 제안 10건을 선정한 것입니다. 선정된 우수 제안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K-교통패스 등이 포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살펴본 국민제안 10건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건 가운데 실제로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최종 3건인데요. 21일 뉴스에서 기자가 언급한 바 있듯이, 최종 3건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법 개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많은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제안은 가장 많은 투표수를 획득하고 있는 안건 중 하나로, 향후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슈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업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온라인 마켓 업체들은 영업 제한이 없는 반면, 대형마트만 제한을 받는 것이 시장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줄이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위의 이러한 행보가 향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해당 이슈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투표가 완료될 때까지는 보다 더 신중하되 명확하고 다양한 정보가 전달되어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선거 경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언급되고 있는 많은 정치권 인사 중에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있습니다. 청년정치의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연합뉴스TV는 청년정치에 주목하여 보도한 바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보도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10일 오전 8시 <일요와이드>에서는 이준석 대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등 청년 정치인들이 선거 이후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헌정사 최초로 30대에 당 대표에 오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년 여 만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하여 2030 여성 표를 끌어 모든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당 대표 도전은 당이 허용하지 않아 불발되었으며, 정의당 비례대표 1, 2번으로 당의 전면에서 섰던 류호정, 장혜원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선거 참패는 물론 정당 이미지를 나쁘게 한 부분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각자 상황은 다르지만,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선거 직후 위기를 맞았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이들 스스로 정치적 위기를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있기도 하지만, 이들이 처한 현재의 상황이 청년정치 자체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음을 전했습니다. 15일 오후 1시 <뉴스센터13>에서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선언을 간략하게 전했습니다. 보도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당적 보유 기간 미달로 출마자격이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가 되면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는 등 당권 도전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대변인은 입당 6개월이 안돼 출마 자격이 없는 박 전 위원장에 대해 “접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반려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19일 오후 12시 <뉴스센터12>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후 부산에 이어 강원도에서 당원들을 만나며, 지지권 결집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6개월 징계와 관련하여 대법원 유죄를 받았거나 실형이 확정되었던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진영 숙명여대 객원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처내기’라는 분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하며, 현재 지지율에서 가장 많이 이탈한 지지층이 2030세대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이탈층을 다시 집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이, 이준석 대표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청년정치 이슈는 매번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지만, 매번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자가 지적한 대로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공교롭게도 선거 이후 위기를 맞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도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원인으로 다양한 시각을 덧붙여주었는데, 한편으로는 두 사람의 상황이 다른 만큼 한꺼번에 묶어 ‘청년정치’를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언론에서도 이준석 대표와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언급하며, 청년정치의 후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보도된 내용의 주제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일 보도 이후에도 이준석 대표와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보도는 계속 이어지고는 있으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후 보도는 청년정치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각 개별 정치인으로서의 행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에서 언급된 다양한 원인을 논의하는 등, 청년정치 관련 이슈가 조금 더 발전된 방향의 의제들이 보도되기를 바랍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2022년 7월 3일 04시/ 김창숙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2년 7월 10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2022년 7월 17일 04시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2년 7월 24일 04시 / 안호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2022년 7월 31일 04시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